

네! 또 부정부패입니다.

기윤실 투명성 포럼

2018년 11월 29일(목) 19시 30분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순서 및 목차

사회 :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 본부장

7:30~8:20

발제 1 :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감사관, 한국투명성기구 (전)회장

한국 사회의 부패의 특성과 기독교인의 자세 3쪽

8:20~8:30

논찬 1 : 장정욱 서울 옴부즈만,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 팀장

13쪽

8:30~8:40

논찬 2 :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무력감에 균열을 가하는 보통 시민의 정치 19쪽

8:40~9:00

토론 및 질문 : 다같이

발행일 | 2018년 11월 29일

발행인 | 백종국

편집인 | 정병오

편집 | 최진호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한국사회 부패의 특성과 기독교인의 과제

김 거 성*

1. 부패와 기독교

본 발제자가 신학생이던 시절, 다니던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강사 목사님이 십일조를 바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한 하사관 가정의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소개하였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곤궁했던 하사관인 집사 부부가 십일조를 바치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인사계로 발령이 났고, 영관급 장교들까지 굶신거리며 봉투를 들고 찾아오게 되었고, 그 후 2년간 인사계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져터 빚을 다 갚고 집도 두 채나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라는 강사의 요구에 교우들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다.

2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른 교회의 장로가 검찰에 소환되었다. 그는 뇌물 사용처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 중 2백만원은 십일조로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답변하였다.

30년 40년 지난 이야기들이지만 이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부패도 하나님의 축복인가 자문하게 만든다. 기독교는 부패를 통해서라도 돈을 많이 모으게 하는 종교인가?

2. 부패의 개념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는 “부패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권한의 사적 이익을 위한 남용(Ab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gain)이라고 정의되며, 피해 금액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grand), 소규모(petty) 부패로, 그리고 발생 영역에 따라 정치적(political) 부패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²⁾고 설명한다.

OECD 뇌물방지협약, 유엔 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이하 ‘UNCAC’)을 포함하여 최근의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경향은 부패를 한 문장으로 개념을 정의하려 하기보다는, 단순히 ‘뇌물 수수’ 이외에도 사적 이익을 위하여

* 신학박사, 경기도교육청 (전)감사관, 한국투명성기구 (전)회장, Transparency International (전)Board Member, (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2006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한국기독교장로회 구민교회 담임목사(현).

** 이 자료는 2018.1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포럼에서 발표할 [뇌물 없는 부패] 발제 내용을 기초로 손질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토론용으로 공유하는 것 외에 대외적 공유는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https://www.transparency.org/glossary/term/corruption>.

주어진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양한 행위들의 목록 형태로 제시하는 추세이다.³⁾

따라서 진화하는 부패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뇌물’(visible bribe)이 없는 ‘진화된’⁴⁾ 형태의 부패의 형태를 찾아내어 대처하고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발제의 목적은 기존 반부패 정책이 직접적인 뇌물 수수에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광범위한 부패의 영역을 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반부패 정책의 변화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며, 나아가 이와 관련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3. 상탁하청 – 뇌물과 부패의 불일치

1) 한국의 뇌물 문제의 변화

과거 한국사회는 ROTC, 즉 “총체적 부패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⁵⁾이라는 자조 섞인 이름으로 불리웠다. 그 중심에는 ‘봉투’(bongtoo) 또는 ‘촌지’(chonji)로 대표되었던 뇌물 관행⁶⁾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학교나 일선 행정기관은 물론, 심지어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죽어 화장장에 갈 때까지 뇌물은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상생활에 밀착해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국민들은 적어도 일상생활에서의 뇌물 경험은 매우 낮아서 선진국 수준으로 상당한 개선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I의 글로벌 부패 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이하 ‘GCB’) 2017년 아시아-태평양지역판에 따르면, 교육 등 6대 분야 서비스 유형 중 1년 동안 뇌물제공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본 0%, 홍콩 2%에 이어 한국은 3%로 호주(4%)나 대만(6%)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⁷⁾ 특히,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우

3) Geo-Sung Kim, “Bridging Christianity and Anti-Corruption Movement: Christian Ethical Reflections on Sustainable Integrity System”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9. pp. 13 ff.

4) “KARACHI: For Dr Geo-Sung Kim, the chairperson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 South Korea, corruption has gone through Darwinian evolution and adjusted itself to new political as well as social realities. The new species we see today is more “intelligent” than its predecessors.” : <https://tribune.com.pk/story/454859/promotions-not-prison-people-themselves-must-be-the-watchdogs/>.

5) “한국 사회가 R.O.T.C(총체적 부패 공화국이라는 의미의 영문 '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의 이니셜)로 통할 정도로 대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핵심 원인은 바로 기업-금융과 국가 사이의 끈을래야 끊을 수 없는 유착 관계 때문이다.” : <https://wspaper.org/article/96>.

6) Gerald E. Caiden and Jung H. Kim, “A New Anti-Corruption Strategy for Korea”, *Asian Journal of Political Studies*, Vol. 1, No. 1, (June 1993), pp. 133 ff.

7) Transparency International, *People and corruption: Asia Pacific -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5-2017)*, http://files.transparency.org/content/download/2161/13659/file/GCB%20Citizens%20voices_

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 시행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본 발제자는 일선에서의 직접적인 뇌물 수수는 더욱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까닭으로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본 발제자는 우선 다음 몇 가지를 꼽고자 한다. 첫째로 시민의식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한 비판, 둘째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추진된 반부패 정책⁸⁾, 셋째로 1999년 가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되었던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참석 이후 TI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의 영향을 받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개발하여 2000년부터 발표를 시작한 반부패지수⁹⁾와 그 확대판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청렴도조사, 넷째로,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데,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다섯째로 차떼기 등 부패의 결탁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 대응하여 정부, 정치, 기업, 시민사회가 구축한 반부패 연대협력체계인 ‘투명사회협약’(the Korean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등이다.

2) 뇌물과 부패의 불일치, 한국의 사례: CPI와 GCB 사이의 불균형

이처럼 한국사회가 뇌물 문제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으나 부패를 크게 극복한 것이라 하기는 매우 힘들다. 오히려 그 사이 부패는 더 지능화되었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고 하겠다.

이를 입증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GCB에서의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CPI에서의 성적은 오히려 ‘뇌물’과 ‘부패’는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CPI에서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한국의 점수는 3.84점이었으나 김대중정부 시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8년에는 5.6점까지 올라갔다.¹⁰⁾ 특히 노무현정부 하에서는 2003년 4.3

[FINAL.pdf](#).

8) 국무조정실, “제1차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 개최결과” (1998.10.16.) :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50752166>

9) “서울시는 27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년간 위생, 세무, 주택, 건축, 건설공사, 소방, 교통행정, 공원녹지, 환경 등 8개 분야에서 민원처리를 경험한 시민 1만2천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1년 서울시 반부패지수’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공무원들은 시내 25개 구청과 시청, 사업본부 등 52개 기관 소속으로 서울시가 자체 반부패지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연합뉴스 2002.06.27.): <https://news.v.daum.net/v/20020627064022757?f=o>.

10) TI CPI의 순위나 점수를 연도별로 수평 비교하는 것은 부분적인 한계가 있다. 순위의 경우 해마다 조사대상 국가 숫자가 다르며, CPI 점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원자료들의 종류나 질문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PI 점수는 매년 각국의 청렴도의 상승과 하락의 판단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용성을 감안하여 연도별 비교 방식을 채택하였다.

점으로부터 2008년 5.6점까지 1.3점의 큰 상승을 이룩하였다.¹¹⁾

그러나 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5.5점, 그 다음 2010년과 2011년에는 5.4점으로 계속 하락-정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 기준이 변경된 2012년에는 56점,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년과 2014년은 55점, 2015년 56점을 받았던 데서 2016년 다시 53점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시기인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의 CPI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MS-Excel 프로그램에서 추세선을 작성하여 비교해 보면 그 하락세가 확연히 드러난다.¹²⁾ 이로부터 도출된 추세선의 산식은 $[y=1.824x+36.067]$ 으로 나온다.¹³⁾ 여기서 y값은 해당년도 CPI 점수 기대값이며, x값은 해당년도에서 1998을 뺀 수치이다. 즉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CPI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 매년 1.8점 정도씩 개선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CPI 지수	순위	조사대상국 숫자	구분
1995	4.29	27위	41개국	문민정부
1996	5.02	27위	54개국	
1997	4.29	34위	52개국	
1998	4.2	43위	85개국	
1999	3.8	50위	99개국	국민의정부
2000	4.0	48위	101개국	
2001	4.2	42위	91개국	
2002	4.5	40위	102개국	
2003	4.3	50위	133개국	
2004	4.5	47위	146개국	참여정부
2005	5.0	40위	159개국	
2006	5.1	42위	163개국	
2007	5.1	43위	180개국	
2008	5.6	40위	180개국	
2009	5.5	39위	180개국	이명박정부
2010	5.4	39위	178개국	
2011	5.4	43위	183개국	
2012	56 ¹⁴⁾	45위	176개국	
2013	55*	46위	177개국	
2014	55*	43위	175개국	박근혜정부
2015	54*	43위	168개국	
2016	53*	52위	176개국	
2017	54*	51위	180개국	문재인정부

표. 한국의 CPI 변화 추이 (1995~2017)

Sourc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ices 1995-2017*, (재구성).

- 11) 2008년 CPI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되었으나 원자료의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 시기로 보여지므로 여기서는 노무현 정부의 결과로 귀속시킨다.
- 12) CPI 점수는 초기에는 3년, 최근에는 2년 동안의 원자료들을 표준화하여 단일지수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2008년 CPI 점수의 경우는 실제로 2007-2008년에 발표된 자료들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므로 노무현 정부 시기의 실적으로 포함시킨다.
- 13) 한국투명성기구, 『2020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12), p. 6 참고 재작성.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점수가 반영된 2009년부터의 CPI 결과들은 점점 기댓값과 멀어져왔고, 급기야 2017년 결과는 기댓값 71점보다 무려 17점 아래인 54점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나 홍콩, 일본은 물론 대만에도 뒤지는 부끄러운 성적이다.

만약 기댓값과 같이 2017년 CPI 점수가 17점 위인 71점이었더라면 20위 일본(73점)에 근접하는 21위로 청렴선진국을 향해 크게 발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CPI 결과가 주는 교훈은 뼈아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은 이러한 기댓값과 실제 CPI 점수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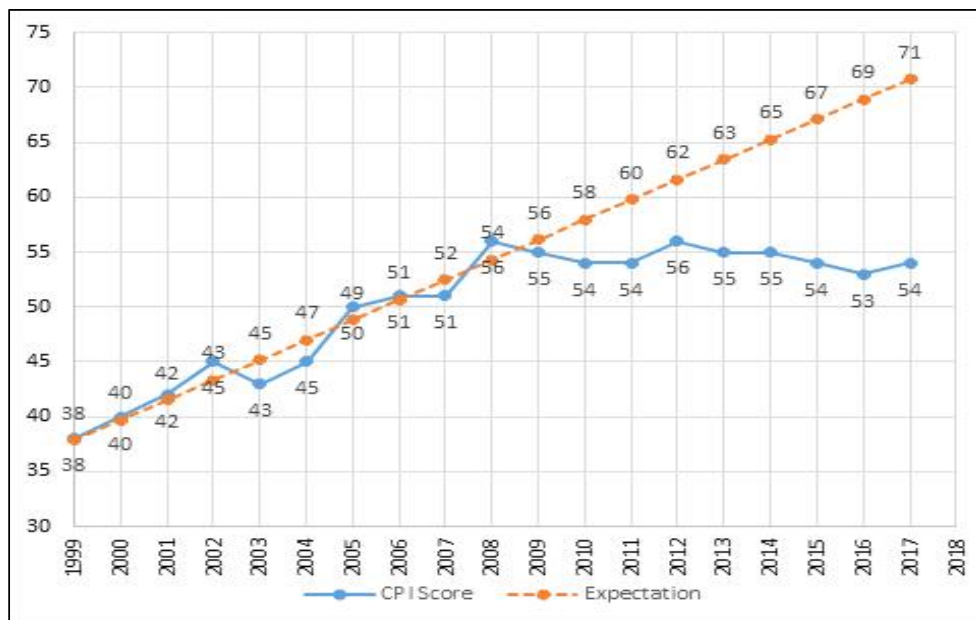


그림. 한국 CPI의 기댓값과 실제 점수 (자료: 한국투명성기구, 재가공)

이러한 GCB와 CPI 결과에서 한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불균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본 발제자는 이를 ‘상탁하청’(上濁下淸)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⁵⁾

이러한 뇌물과 부패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뇌물’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공여자와 수뢰자, 금액, 그리고 형사적 범법 등을 특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부패’에서는 지위나 권한의 남용의 행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며 서로 주고받는 대가를 특징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부패는 분명하게 형사적 통제 대상이 되는 뇌물과는 달리 부패는 외형적으로는 합법이거나 또는 불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수도 있다.

14) CPI 점수는 2011년까지는 10.0 만점 기준으로, 2012년부터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발표되었다.

1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140279> (매일경제) :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한국 부패 트렌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놔다. 작은 부패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사회지도층에 의한 큰 부패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 한국 부패 문제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큰 부패가 만연하는 것에 대해 "과거 일본식 부패 모델로 '상탁하청(上濁下淸)'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직부패를 해결할 제도부터 바꾸자고 역설했다."

4. 정책포획, 지능형 부패

1) 정책포획의 개념

‘정책포획’(policy capture)은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기득권들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당한 이권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¹⁶⁾ 카우프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¹⁷⁾

그렇지만 부패의 실체는 양면적이다: 첫째, 그것은 대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자 이상의 결탁을 포함한다; 둘째, 게임의 규칙들이나 법률, 제도 등이 최소한 부분적일지라도 특정한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곳에서라면 많은 나라들에서 부패의 여러 형태가 합법적일 수도 있다.

그의 지적과 같이 정책포획은 ‘거시적’ 부패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¹⁸⁾ 그런데 정책포획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뇌물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UNCAC에서도 ‘자국공무원의 뇌물수수’(제15조)나 ‘외국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제16조), ‘공무원의 횡령·배임과 그 밖의 재산 유용’(제17조) 등의 필수적 범죄화 외에 ‘영향력에 의한 거래’(제18조), ‘직권남용’(제19조) 등의 범죄화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의 남용, 마찬가지로 부당한 이익 등은 명확한 법률 규정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따라서 이를 입법화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직접적인 뇌물이 없이 평소 다른 합법 또는 반합법 형태의 유착관계를 유지했거나, 뇌물 수수가 있었더라도 공여자와 수뢰자 모두 이를 숨기거나 부인함으로써 수면 아래에 잠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공여자와 수뢰자가 직접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권력과 민간 사이의 유착관계도 마찬가지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찾기는 어렵다는 난관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포획은 일종의 ‘지능형’ 부패라 할 수 있다.

16) OECD, *Preventing Policy Capture: Integrity in Public Decision Making* (Paris: OECD, 2017), p. 3 : <https://dx.doi.org/10.1787/9789264065239-en>.

17) Daniel Kaufmann, “Corruption, Governance and Security: Challenges for the Rich Countries and the World” (October 2004). Available at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SSRN)*: http://papers.ssrn.com/sol3/Delivery.cfm/SSRN_ID609897_code163813.pdf?abstractid=605801&mirid=1

18) Geo-Sung Kim, *op.cit.*, pp. 35-39 참고.

제18조 영향력에 의한 거래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고의로 범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한다.

가.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로 하여금 그들의 실재적·잠재적 영향력을 남용하게 하여 이 행위를 부추긴 자 또는 타인이 당사국의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의 또는 제 공하는 행위

나.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가 당사국의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그의 실재적·잠재적인 영향력 남용을 목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2) 한국에서의 정책포획의 사례들

정책포획은 정책입안자, 정책평가자, 정책 실행자 여러 영역에서 결탁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중첩적으로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실제로 이른바 ‘4대강 사업’, 경전철이나 고속도로 등 ‘민자 인프라 사업’, ‘사립유치원 비리’ 등 정책포획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 등에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뇌물이 오고 갔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이나 사용료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합법적으로 뺏아가도록 제도화하고 또 운용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자잘한 뇌물수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몇몇 예외적인 뇌물 수수가 드러나기도 하지만¹⁹⁾,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유착 관계의 전부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국민 대다수의 복리와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을 배반하고 소수 이익집단의 기득권을 옹호하며 대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형태

19) “신학용 전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시절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유총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기소됐다. 또 국회 보좌진들의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11일 이를 기각했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138>.

의 지능적인 부패 사례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자로 되지만 직접적인 가해자는 특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대상도 드러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5. 전관예우, 시간차 부패

이른바 ‘전관예우’ 또한 시간차 부패요, 또한 지능형 부패라 할 수 있다. 직접적인 뇌물은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선임자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대신에 자기의 후임자들로부터 비슷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직자 등이 위계질서 속에서 상급자 등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도록 부당하게 요구받을 때 이를 순응한 다음, 자신의 동료나 하급자에게 비슷하게 부당한 요구를 부탁, 강제하여 이를 관철시킨다면, 이 구조 속에서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흔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분명한 부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조계 등에서 아직도 이러한 전관예우 현상이 만연하다고 믿고 있다. 또한 이는 최근의 핵발전 관련 유착관계인 이른바 ‘핵 마피아’, 또는 세월호 참사에서 이른바 ‘해피아’ 등으로 불리는 여러 사례들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²⁰⁾

6. 반부패 정책에서의 시사점

1) 뇌물 보다 부패에 집중하는 반부패 정책

뇌물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은 직접적이며 일상적인 뇌물수수라는 후진국형 ‘뇌물공화국’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공화국’이라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다. 이제 한국이 새롭게 ‘뇌물 없는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앞서 설명한 정책포획이나 전관예우 등의 뇌물이 직접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부패의 네트워크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반부패 정책이 되어야 한다.

2) 반부패기구의 지능형 부패 통제력

지난 2016년 촛불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항거는 중하위직에서의 자잘한 뇌물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 고위직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합법을 가장한 지능형 부패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반부패기구인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크게

20) 김용진, “최순실 키운 괴물 ‘마피아즘’-온정주의 조직문화의 괴물...‘우리가 남이가?’” (사건인) : http://www.sagunin.com/sub_read.html?uid=18622.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이른바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 국민 세금이 특정 이익집단의 주머니로 새고 있을 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국가 기관이 특정 후보의 캠페인에 나서고 있을 때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 그런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조직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반부패기관은 이러한 고위직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사권을 보유하고 이를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꾸준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하여야 한다. 특히 그 조사 권한의 범위에 UNCAC의 제18조와 제19조의 권고사항들까지 범죄화 하는 것을 입법에 담아 통제 영역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청렴도 측정 모델의 재고

또한 소규모의 ‘주머니 뇌물’에만 집착하고 대규모의 정책포획이나 전관예우 등 지능형 부패에 대해서는 방조한다면 그러한 반부패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효력도 매우 제한적으로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관심에서 보다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진화한 부패 형태들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한국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약점도 메꾸고, 활동 영역을 재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TI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뇌물 없는 부패 영역을 감안하여 GCB나 CPI의 측정 모델을 다시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포획 증후군이나 공권력의 남용이나 결탁 등을 포획하기 위한 개정에 나서야 한다.

4) 지능형 부패에 대한 공익제보와 탐사보도

언론, 시민사회 등과 더불어 국민들도 이처럼 보이는 뇌물 없는 지능형 부패의 근절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직접적 뇌물 공여나 수뢰가 아닐지라도 정책포획이나 전관예우 등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또 보호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익제보의 영역을 확장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언론기관 등의 지속적인 탐사보도를 통해서 자잘한 뇌물 사건만이 아닌 대규모 정책의 왜곡으로 특정 집단의 이권을 보장해 주는 부패 구조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

7. 기독교와 반부패

1) 교회의 회개

앞서 소개한 사례들과 같이 한국교회의 물질숭배는 부패조자 하나님의 축복이라 선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목회자들은 신앙인으로 정의를롭게 윤리적으로 생활할 책임에 대해서 설교하는 대신, 오히려 부패를 포함한 온갖 비윤리적인 수단, 아나가 범법행위를 동원해서라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고 또 선전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직결되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회가 부패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와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이처럼 교회 스스로 신앙의 본질로부터 크게 궤도 이탈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이켜야 한다.

2) 신앙인의 반부패 이해와 실천

신앙은 그 바탕에서 사랑을 추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부패와 정의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신앙은 부패를 옹호하거나 용인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신앙인들이 부패에 가담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도록 가르치고 또 독려하며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 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엡 5:6-20, 표준새번역)

논찬 1

장 정 욱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팀장, 서울 옴부즈만 위원)

1. 우리사회의 부패인식의 변화

- 전통적 의미의 부패

: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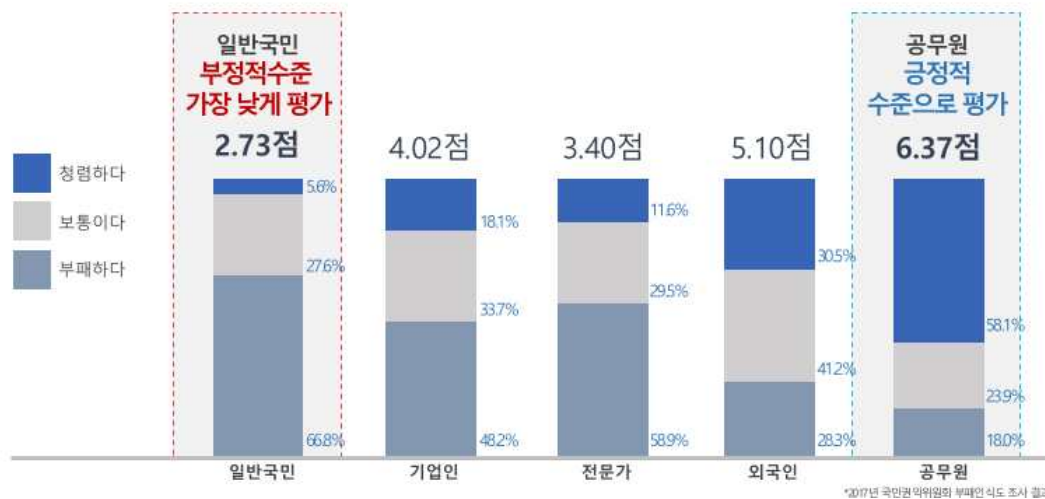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오늘날의 부패의 의미

: 뇌물수수, 배임·횡령, 예산낭비 같은 전통적 부패의 개념을 포괄하고, 불공정·불투명, 공익침해, 이해충돌, 온정·연고주의에 의한 행정행위, 복지부동, 무책임을 부패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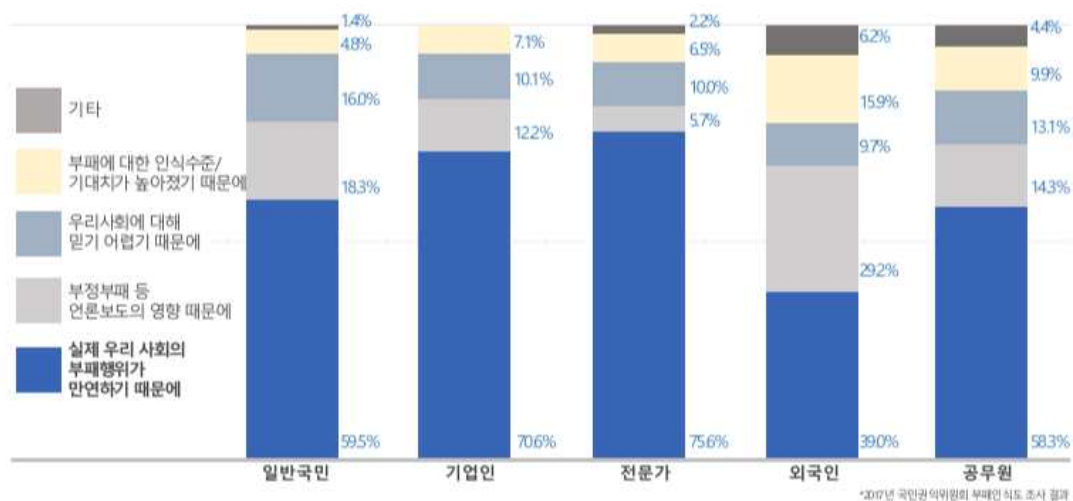
- 사회전반의 부패 수준 인식

-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청렴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이 5.6인 반면 공무원이 58.1%가 청렴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국민과 공무원간의 부패의 인식이 다를 수 있음
- 부패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일반국민이 66.8%로 가장 높고, 전문가 58.8%, 기업인 48.2%, 외국인 28.3%, 공무원 18.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부패인식의 차이는 오늘날의 부패의 의미와 과거 전통적 부패의 의미에 따른 인식의 차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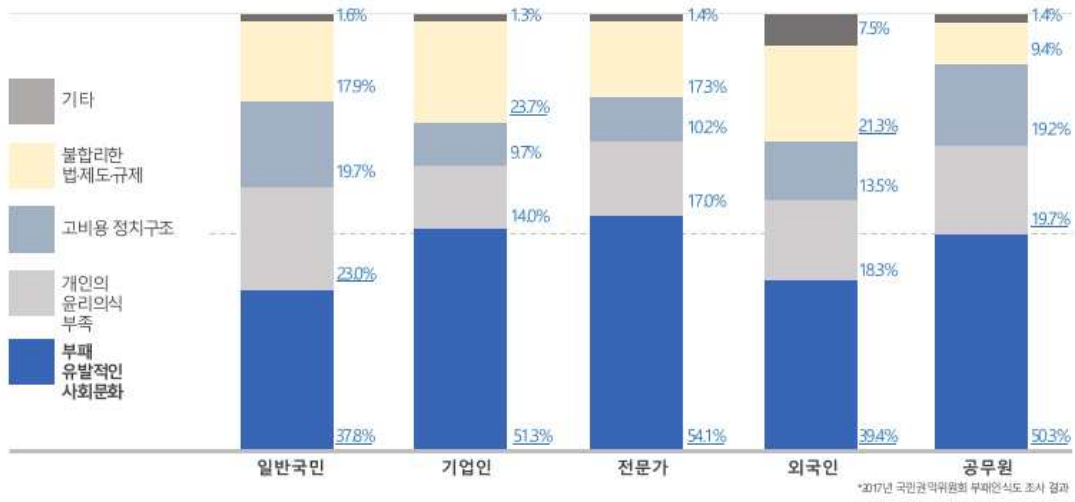
- 우리 사회를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 모든 조사대상이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외국인은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과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15.9% 부정적 언론 보도의 영향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29.2% 영향이라고 뽑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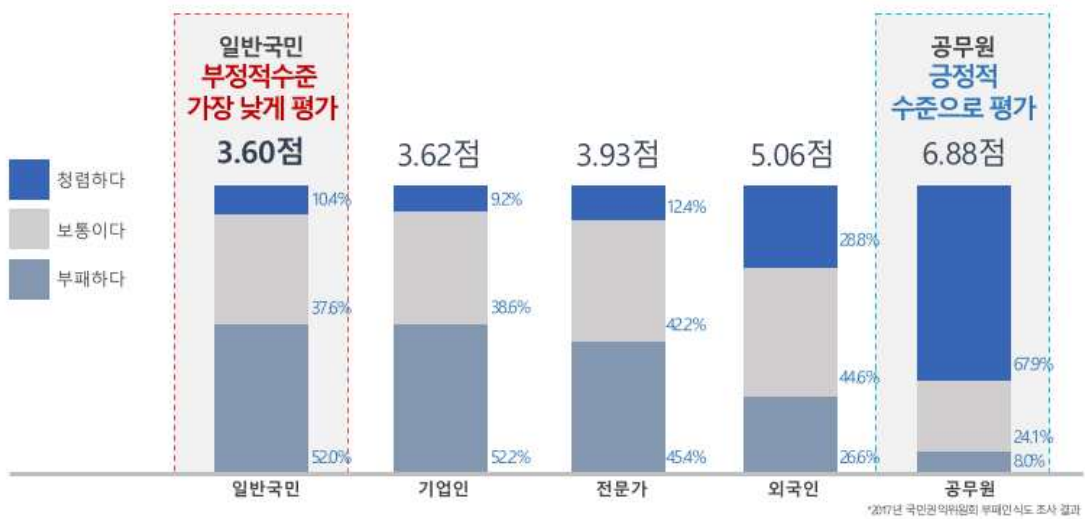
- 우리 사회의 부패원인 인식

- 부패발생 원인으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기업인 23.7%, 외국인 21.3%의 경우 '불합리한 법, 제도, 규제' 응답
- 일반국민 23.0%, 공무원 19.7%의 경우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른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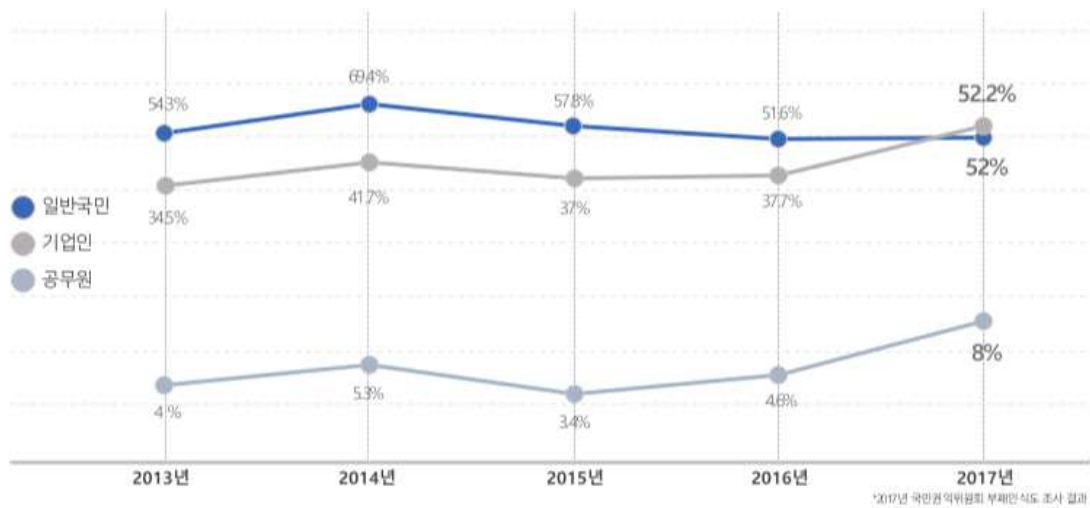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 인식

- 공직사회가 청렴하다는 응답은 공무원이 67.9%로 인식의 차이가 큼
-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은 기업인이 52.2%로 가장 높고, 외국인은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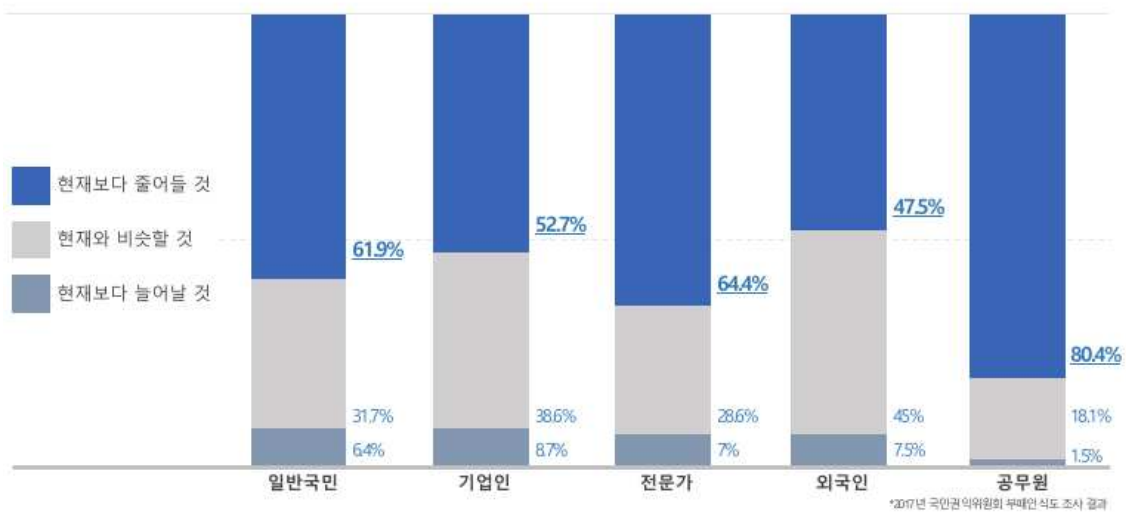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

- 모든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률이 전년보다 증가
- 기업인들의 부패인식 응답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음



- 향후 우리사회 부패수준 전망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과 관련 모든 조사대상은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부패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 '고위직 부패감사', '부패유발 문화 개선' 순으로 응답
-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지적, 반면 공무원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을 제시



2. 부패인식을 통해서 본 반부패 방안

- 응답자들은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부패유발원인으로는 사회문화적인 이유를 큰 원인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사회적인 문화를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집단을 제외한 응답자들은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보다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응답자들이 비교적 막연한 연고주의·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없애기 위한 행위보다는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적발된 부패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개선하는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전통적인 부패의 범위를 넘어서 오늘날의 부패의 의미를 갖는 불공정·불투명, 공익침해, 이해충돌, 온정·연고주의에 의한 행정행위, 복지부동, 무책임의 문제는 현재의 제도로는 적발·처벌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임
- 드러난 부패범죄를 엄벌하되 현재 범죄화되지 않은 부패행위를 범죄화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

3. 반부패제도와 문화

- 함무라비 법전 : 어떤 자가 뇌물로 곡물 또는 금전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며 처벌
- 출애굽기 : 23장 (6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의 소송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공의를 구부려서는 안 된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눈 밝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

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킬수 있다.

- 상피제 : 1092년 고려시대에 도입되어 조선에서도 시행. 본인의 부계 친족 및 어머니의 친족, 아내의 친족 중에서 4촌 이내의 사람과는 동일 관서나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서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이조와 병조의 당상관처럼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사헌부와 사간원 등 비리를 감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서에는 더욱 엄격하고 범위가 넓게 적용
- 분경금지법 : 1470년 조선 성종1년에 경국대전에 성문화. 분경이란 벼슬이 높은 친척의 집에 다니며 뇌물을 바쳐서 벼슬을 부탁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분경금지. 경국대전에는 상급관리의 집을 방문하여 엽관운동을 하는 자는 곤장 100대를 가하여, 3000리 밖으로 유배
-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시대에도 뇌물은 금지하고 있었음. 심지어 인사청탁금지나 이해충돌방지제도로도 고려 시대 부터 일부 도입하여 시행한 바 있음. 이를 넘어서는 반부패제도가 도입 정착되어야 함
- 우리나라 반부패제도의 모델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난 엔론 사태 이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2002년)하여 미국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계 상장사에서 회계문제가 발생해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장부의 정확성을 보증한 기업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기업(인)과 회계회사를 엄벌하였음
- 최악의 정치스캔들인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1972-1974) 이후 정부윤리법(1978), 회의공개법(1976), 행정사무개혁법(1978)에서 기원하는 내부고발자보호법(1989) 등 부패를 처벌하고 정부의 설명책임의무를 강화한 반부패제도를 마련하였음
- 박근혜 대통령 시기 최순실로 대표되는 국정농단사태와 그로 인한 탄핵,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분식회계, 유치원회계부정사태와 같은 다양한 부패문제가 드러난 한국 사회가 당시 미국 사회가 선택한 것 이상의 반부패제도를 만들어 내야 할 것

4. 기독교와 반부패

- 기독교의 부패인식이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가?
- 불투명한 교회회계와 투명성 요구를 목사에 대한 불신으로 보는 교회
-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교회의 목회자 자녀세습
- 과거 주목받던 기독교 표방기업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오래 반복돼 온 부당노동행위, 농성장 출입문 봉쇄 등 노동자 적대 행위 또는 임금체불 등
- ‘우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정도에 부패는 물론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인식이 멈춰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됨 

무력감에 균열을 가하는 보통시민의 정치

- 우리는, 물땀들을 던질 수 있을까?

조 성 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정치하는엄마들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의 시작은 한 장의 정부 보고서로부터 시작됨.
- 2017년 2월 발표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유치원·어린이집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95개소 대규모(또는 기업형) 유치원·어린이집 점검 개요와 결과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음. 당시 95개 기관 중 91개 기관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 205억원이 적발되었음. 적발 유형 중 65.9% 가량(약 135억원)이 ‘사적사용, 무증빙 또는 위장 거래 등’ 부당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었음. 가족 회사와 부당거래 등 불법·편법적 가족 경영으로 인한 적발이 26.9%로 약 55억 가량이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정보공시시스템 개선·회계 개선시스템 개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하겠다는 등의 향후 계획과 추진 일정 이 마련되었지만 사실상 거의 추진되지 못했음
- 2017년 6월 창립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단체 창립 직후 해당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접하고, 해당 어린이집·유치원 명단 공개를 위한 여러 차례의 정보공개청구와 기자회견²¹⁾을 진행함.
- 전국 소재 140여개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 전남, 울산, 세종 등을 제외한 120여개 곳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제 4호, 제 5호, 제6호에 의거 요청하신 내용은 감사와 수사에 관한 사항이며,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답변과 함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음. 이후 국무조정실과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²²⁾을 진행하였음. (현재까지도 진행 중임)

21) 2017.11.31. 비리유치원 감싸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2018.05.20. 비리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
2018.10.30. 한유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검찰고발 기자회견, 서울지검 앞
2018.11.06. 교육부의 비리 유치원 비호 방조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원 정문 앞
2018.11.12. 유피아 3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국회정문 앞

- 이후, MBC 뉴스데스크 팀과 박용진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감사 적발 유치원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대한민국 유치원 비리 실태와 연 2조 가량의 유치원 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
- 관련하여 현재의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인 유피아 3법(박용진 의원실 대표 발의, 민주당 당론 발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본회의는커녕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당의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병합심사를 진행하자는 등의 석연찮은 이유로 법안 심사 자체를 거부해 전형적인 시간끌기 정치라는 비판을 받음. 그 와중에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한유총과 공식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고, 해당 토론장에서는 “정부 돈 받아서 명품백 사면 안 되는겁니까?” 등과 같은 발언이 쏟아져 공분을 산 바 있음.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은 2013~2015년 사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당시 업계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로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며,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경민학원(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포함) 이사장 재직 당시 허위 그림 매입 등으로 약 75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교육법 제정 시기인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의 지난 14년간의 관련 회의록(국회 사이트)을 검토하며 한유총을 비호해 온 정치인 실명과 어록을 담은 카드뉴스를 연재하고 있음. 현재까지 자유한국당 이장우, 박상도, 이군현, 홍문종 의원, 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5선 (전) 국회의원 황우여,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바른미래당 소속 진수희 (전) 의원 등이 해당됨.
- 한유총의 전방위 로비 행태는 여러 기획 보도 들을 통해서도 다루어 진 바 있음. 그 중 신학용 전 의원의 구속건과 같이 뇌물 수수 정황이 드러난 사건을 넘어, (앞서 발제문에 언급된) 정책포획·지능형 부패까지 포함해 개념화한다면, 이번에 불거진 유치원 비리 사태야 말로 대한민국의 부패 유형 중 하나로 유형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22) 국무조정실과 인천시 교육청 두 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진행한 바 있음

-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도 소수 이익 집단을 대변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한유충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공모공동정범 등의 명목으로 형사고발 하고, 교육부의 비리 유치원 비호 방조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바 있음.
- 리서치앤리서치가 박용진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만 19살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11월 22일~23일(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92% 이상이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수준의 공적 감사 의무화에 동의한다(매우동의 67%, 동의 25.4%)고 응답했으며, 박용진 3법 세부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모른다는 응답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 됨. 또한 유치원 개혁 입법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자유한국당, 한유충, 교육부 순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압도적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법안 심사 거부와 지연 전술로 연내 유피아 3법 통과는 요원할 것으로 예견 되는 상황임.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공금 유용 시 횡령죄로 형사상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정만이라도 통과시키기를 국회에 요구한 바 있음.
- 발제문의 지적과 같이 현재 한국 사회는 ‘뇌물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벗었는지언정, ‘부패공화국’이란 평가를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바꿀수 있을까’라는 무거운 질문이 남겨짐
- 발제문의 지적과 같이 독립적이고 힘 있는 반부패기관이 설치되고 조사권을 보유해 철저히 활용할 수 있다면, 법제도적 개편을 통해 ‘영향력에 의한 거래’(UNCAC 제 18조), ‘직권남용’(제 19조) 등까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할 수 있다면, 지능형 부패에 대한 공익제보와 탐사보도가 영향력 있게 지속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러한 대안은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요원하게 느껴짐. 결국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겨짐.
- 아동의 건강권 및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쟁점 법안일 수 밖에 없는 사립 유치원 비리 방지 법안조차 본회의는커녕 해당 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다뤄지기 어려운 현 상황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보여줌.

- 토론자는 이 시점에 역설적으로 “의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함. 물론, 지능형 부패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반부패기구의 설치, 비리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공공관리체계의 구현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임. 다만 현재의 정치 역동 하에서 몹시도 요원해 보이는 법제도적 개편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당국과 실무 담당자들의 의지가 선제적으로 필요함.
- 유치원 비리 사태의 핵심도 사실상은 관련 법제도의 미비성 뿐 아니라, 정부 당국의 의지 자체에 있었음. 물론 미비한 현행법 하에서 제대로 된 감사도, 감사 결과에 따른 처벌도 어려운 형국이긴 하지만,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각 기관과 담당자들의 의지에 따라 감사 및 그에 따른 행정 조치의 파급력은 천차만별이었음.
- 실제로 MBC의 단독 보도를 계기로 관련 명단이 실명 공개 되기 이전에도 전남, 울산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수 감사와 실명 공개가 이루어져 왔음. “국무조정실도 비공개한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나”는 기자의 질문²³⁾에 담당자들은 “다른 지역이 감사 원칙을 안 지킨 것 뿐”이라며 굉장히 원론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사태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권한 범위·실무 인력의 한계·전방위적인 화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의 의지에 바탕 해 도내 기관들을 감사하고 그 결과 구체적인 비리 비위 정황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큰 이슈가 되었음.
- 그간 유아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수십만 원아와 그 학부모, 예비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음에도, 정부는 한유총의 정책 포획 행위 뿐 아니라,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연이은 행사 파행, 집단 휴업 강행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아왔음. 도리어 혐의적·광의적 관점에서 자행되는 이들의 부패 행위는 비리유치원 사태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기 직전인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 속에 반복 되어 온 것과 다름 없음.
- 정부 당국의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힘은, 오로지 국민들의 압도적인 관심과, 보통 시민들의 정치 그 자체에서 비롯됨.

23) 2018.10.27. 한겨레 “유치원 전수감사명단공개, 전남·울산은 어떻게 해냈나” 임지선 기자

- “유치원 비리 사태는 한 사람이 빚어낸 결과물이 아니다. 현장의 감사관들이 씨앗을 뿌리고 정치하는엄마들이 물을 주고, 시민들의 관심이 열매를 맺게 했다.”는 발제자의 발언처럼 최소한의 양심과 시민 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보통 시민들의 참여와 정치가 극적인 전환을 이끌어냄. 물론 앞으로도 해결해 가야 할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는 <무력감에 균열을 가하는 보통 시민의 정치>(의 가능성)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음.

[이어지는 ‘어느 기독교 청년의 소심한 고백’]

- 전문가주의와 부패의 상관관계?
- 스스로 사유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 “설마”와 “다들” 사이에 선 경계인
- 역사의식의 부재, 비정치적인 교회
- 질문하는 교회,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물맷돌을 던질 수 있을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지난 30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기윤실 주요 운동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합니다. 2018년에는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표어로 정하여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바른가치운동, ▲청년운동을 전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세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약자와 함께하며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안내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운동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 02-794-6200 (김현아 팀장)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 홈페이지와 오른쪽 QR코드에 접속하여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가입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www.cemk.org